

동아시아 해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해군력 및 규범 경쟁*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태평양 전쟁 이후 냉전 기간을 거치면서 동아시아 해양은 비교적 안정적인 평화를 유지했다. 지난 냉전기와 탈냉전기에 걸쳐 동아시아의 해양질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패권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 미국은 막강한 해양 투사력을 바탕으로 구소련 극동함대를 압도했고, 대부분의 역내 갈등을 국지적인 수준에서 봉쇄 또는 봉합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7년 현재 중국의 해양굴기와 미국의 재균형 전략에 따라 동아시아 해양의 세력균형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과거에 미국은 동아시아의 해양 이슈, 특히 중국 관련 이슈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냉전 이후 시작된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그로 인한 힘의 공백을 중국이 공격적인 해양정책과 해군력 증강을 통해 급속히 메움에 따라 미중 간 신 해양 패권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과거 미소 간의 해양력 경쟁이 '선(line)-면(plane)' 대 '점(point)'의 대결이었던 반면, 미중 간의 해양패권 경쟁은 '점'-'선'-'면' 전략의 동시다발적 경합과 충돌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미중 양국은 상대국 영해 내에서의 무해통항권,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항행의 자유권의 범위와 조건을 놓고 '법률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중 간 해군력 경쟁과 규범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해역의 안보 환경은 당분간 매우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을 전망이다. 중국은 자신의 힘을 직간접적으로 시위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변국들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것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급속히 현실화되고 있는 중국 위협에 대비해 세력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 즉 해군력 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아울러 동아시아 해양안보 지형은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규범 영역에서의 치열한 논쟁과 줄다리기의 결과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목 차

1. 서론
2. 2000년대 이전
동아시아 해양분쟁
관련 미중관계의 변화
3. 2000년대 이후 미중 간
해군력 경쟁
4. 미중 간 규범 경쟁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서론

**과거 미소 간의 경쟁이
'선(line)-
면(plane)' 대
'점(point)'의
대결이었다면
미중 간의
해양패권 경쟁은
'점' - '선' - '면'
전략의 동시다발적
경합과 충돌로
이해할 수 있음**

- 이 글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함
 - 왜 미국과 중국은 동아시아의 해양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가?
 - 미중 해양경쟁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 향후 미중 간 해양경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 전후 동아시아의 해양질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음
 - 역내 대부분의 국가들이 해양을 접하고 있는 연안국가들이지만 일부 국가들 간의 도서 영유권 및 해양경계 문제, 자원개발 문제를 둘러싼 국지적 갈등을 제외하면 태평양 전쟁 이후 대부분의 냉전 기간 동안 동아시아 해역은 비교적 안정적인 평화를 유지함
 - 지난 냉전기와 탈냉전기에 걸쳐 동아시아의 해양질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패권에 의해 유지되어 옴
 - 미국은 막강한 해양 투사력을 바탕으로 구소련 극동함대를 압도했고, 대부분의 역내 갈등을 국지적인 수준에서 봉쇄 또는 봉합해 옴
- 그간 유지되었던 이 균형은 21세기 들어 크게 흔들리고 있음
 - 냉전 이후 시작된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그로 인한 힘의 공백을 중국이 공격적인 해양정책과 해군력 증강을 통해 급속히 메우고 있음
 - 미중 간 해양력 경쟁은 과거 냉전시기 태평양과 인도양의 제해권을 두고 미소 양 진영이 치렀던 전통적 해양 군비경쟁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 과거 미소 간의 경쟁은 전략이나 해군력 측면에서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 속에서 전개된 반면, 미중 간의 해양패권 경쟁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미국의 해양패권을 위협하기에 충분함.
- 과거 미소 간의 경쟁이 '선(line)-면(plane)' 대 '점(point)'의 대결이었다면 미중 간의 해양패권 경쟁은 '점'-'선'-'면' 전략의 동시다발적 경합과 충돌로 이해할 수 있음
 - 중국의 해양굴기(海洋崛起), 해양대국화 전략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상의 유·무인도서에 대한 영유권 강화라는 '점' 전략에서 출발하여 남해구단선, 제1도련, 제2도련으로 대표되는 '선' 전략으로 진화해 옴
 - 미국의 해양패권에 대한 방어적 성격인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Anti-Access Area Denial, A2/AD)' 전략은 앞으로 공격적인 '면' 전략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이 구상하는 유라시아의 대륙과 해양을 잇는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또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21st-century Maritime Silk Road)’ 전략도 그 연장선에 있음(구민교 2016)

- 중국의 해양력 확대에 대한 미국의 대응도 점-선-면 전략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음: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to Asia)’ 전략, ‘공해전투(Air Sea Battle)’ 개념, ‘공역 접근 및 기동을 위한 합동 개념(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 JAM-GC)’ 등
- 미중 양국은 상대국 영해 내에서의 무해통항권,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항행의 자유권의 범위와 조건을 놓고 ‘법률전쟁(legal warfare 또는 lawfare)’을 벌이고 있음
 - 현행 「유엔해양법협약」은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외국 선박이나 항공기의 무해통항권과 항행의 자유/상공비행의 자유를 각각 보장하고 있으나,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보장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음
 - 미국은 타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미 해군의 군사활동도 관습국제법 및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핵심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맞서 중국은 자국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사전허가 없이 외국 군함이 군사훈련이나 작전을 수행하지 말 것과 군사시설을 배치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음
- 이 글은 미중 간에 전개되고 있는 해군력 및 해양전략 경쟁과 유엔해양법의 적용과 해석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규범 경쟁의 양상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음

**미중 양국은
상대국 영해 내에서의
무해통항권,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항행의 자유권의
범위와 조건을 놓고
‘법률전쟁(legal
warfare 또는
lawfare)’을
벌이고 있음**

2. 2000년대 이전 동아시아 해양분쟁 관련 미중관계의 변화

- 전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파생된 샌프란시스코 체제하에서 미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지만 사실상 이를 분쟁지역으로 간주해 옴
- 역설적으로 미국은 줄곧 전후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원인 제공자이자 간접 이해당사자의 역할을 해왔지만 중국은 1960년대 말까지 역내 해양 영유권 분쟁에서 수동적 당사자 입장을 취함
- 1960년대 말 이전까지만 해도 연안에 국한되었던 중국의 해양 인식이 주변국들의 자원개발 경쟁으로 인해 동중국해의 대륙붕으로 전면 확대됨

중국은 1992년

「영해와 접속수역에 관한법」(Law o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을 선포한 이후 영토 주권 문제에 관한 한 원칙적으로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함

- 월남전에 따른 미중 간의 데탕트 형성 등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동으로 인해 1970년대의 미중 양국은 물론 일본도 해양 영토분쟁 문제를 표면화시키지 않음

- 중국이 해양주권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각성하고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82년 제3차 유엔해양법 회의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면서부터임
 - 1980년대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도서에 대한 영유권은 물론이고 주변 해역의 자원개발과 해상교통로에 대한 이용과 통제능력을 강화하고, 더불어 해군 육성을 통한 해양권 장악이 강대국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임을 인식하는 전환기였음
 - 냉전체제의 완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 중국 해군은 중요한 전략적 변화를 꾀하기 시작함
 - 해군의 전략적 목표가 소련의 극동함대나 미국의 7함대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연해방어’에서 탈피하여 좀 더 적극적인 ‘근해방어’ 전략으로 옮겨가기 시작함
 - 그러나 이 시기에 여전히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부상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는 결코 패권주의적 팽창전략은 아니며, 자기보호와 국제사회의 공동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일관되게 표명하면서 미일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려 함
- 그러나 중국은 1992년 「영해와 접속수역에 관한법」(Law o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을 선포한 이후 영토 주권 문제에 관한 한 원칙적으로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함
 - 중국의 해양법 정비는 향후 해양 분쟁에서 군사적 개입의 근거를 확립했다는 의미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미국과의 대립도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함
 - 1995년 미 국무부는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에 어긋나는 해양 관련 주장이나 해양활동에 대한 제한은 그 어떤 것도 심각한 우려를 갖고 바라볼 것”이라고 경고함
 - 같은 해에 워렌 크리스토퍼(Warren Christopher) 미 국무장관은 필리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미국의 근본적 이익(fundamental interest)이라고 선언함
 - 미국은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립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은 물론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함

3. 2000년대 이후 미중 간 해군력 경쟁

-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은 도서 및 해양분쟁에서 ‘주권은 중국에게 있다 (主權在我)’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음
 - 특히 2010년 이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물론 황해에서 중국이 보여준 공격적인 모습은 세계를 놀라게 함
 -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일련의 분쟁에서 강경한 정책을 취하는 배경에는 미국의 동아시아 귀환과 중국 포위 전략에 대한 거부감이 도사리고 있음
 - 특히 중국은 지난 2009년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존의 불개입 정책에서 적극 개입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아울러 중국은 일본이 일련의 미중 간 갈등을 이용하여 중일 간 분쟁에 미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이 분쟁을 계기로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복귀를 촉진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음

- 동아시아 해양안보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15년 여름부터 불어진 중국의 남중국해 도서의 인공섬 및 군사기지화 정책이었음
 - 중국은 2013년 말부터 2017년 현재까지 남중국해 내에서 실효적으로 지배 중인 8개 암초를 매립과 간척을 통해 인공섬화하고 있음
 - 이 중에서 수비 환초와 미스치프 환초 등은 간조 노출지이기 때문에 유엔해양법상 영해나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매립과 간척을 통해 인공섬을 건설 또는 확장해 옴
 - 미국이 우방국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의 협력하에 전략적 요충지인 말라카 해협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중국해 군사화는 중국의 제1도련선 확보 의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줌
 - 인공섬 조성 및 군사화가 계속될 경우 중국이 이 지역을 군사적으로 보다 수월하게 통제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능력의 증대를 의미함(구민교 2016: 49)

- 이러한 중국의 행보가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은 중국 리더십 내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음
 - 전통적으로 대륙국가 정체성을 유지해왔던 중국의 해양굴기 정책은 시진핑 정부가 출범한 2012년부터 공식화됨
 - 2015년 백서는 중국과 주변국 간 영유권 분쟁과 더불어 미국의 남중국해 개입 및 군사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해군력을 건설할 것을 천명함

*동아시아 해양안보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15년 여름부터
불어진 중국의
남중국해 도서의
인공섬 및 군사기지화
정책이었음*

중국은**소위 제1도련선****이내 행동의****자유 확보에 있어****가장 중요한 지역인****남중국해에 대한****통제력을 확보하고,****이후 제2도련선까지****군사력투사 능력****증진을 시도하고 있음**

- 인민해방군 해군에 대한 전략적 요구도 2013년 백서는 근해방어만 명시하였으나, 2015년 백서는 근해방어형에서 근해방어 및 원해호위의 결합형으로의 변화를 요구함

○ 중국은 소위 제1도련선 이내 행동의 자유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인 남중국해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고, 이후 제2도련선까지 군사력 투사 능력 증진을 시도하고 있음

- 중국이 설령 분쟁 상대국의 일부 또는 모두와 협의하여 해양자원을 공유하더라도 사실상 남중국해는 오늘날 미국의 카리브 해나 멕시코 만과 같이 “중국의 호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음

- 아울러 중국은 자국의 해상교통로 보호 및 확보를 위해 동남아와 인도양의 주요 항구를 하나씩 꿰어 연결하는 차항출해(借港出海; 타국 항구를 빌려 해양 진출) 전략을 펼치고 있음

- 2017년 5월 베이징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 포럼(One Belt One Road Summit Forum)’은 그 잠재력을 과시한 행사였음

○ 중국의 적극적인 해양정책이 방어적인 것인지 공격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또는 실크로드 구상은 중국이 지금 누리는 경제적 번영을 지속하기 위한 필연적인 수단임을 의미함

-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의 추진 중인 A2/AD 전략도 그 속성상 방어적인 것이지만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중국의 구상이 실현될 경우 해양을 장악한 중국이 여전히 선량한(benign) 패권국으로 남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커지고 있음

○ 미 해군은 중국 해양력의 부상에 따라 군사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정하고 있음

- 미국의 새로운 해양전략의 핵심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럽으로부터 아시아로의 해양력 재배치 노력임(박남태 외 2015: 255)

- 이는 2014년 11월 척 헤이글(Chuck Hagel) 미 국방장관이 발표한 제3차 상쇄전략(offset strategy), 즉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재래식 전력 투사능력을 회복하는 국방혁신구상에서도 잘 나타남

○ 2015년 1월 미 국방부와 각 군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의 공해전투 개념 발전 및 새로운 작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공해전투 개념을 JAM-GC로 대체키로 합의함

- 기존의 공해전투는 ‘접근(access)’에 치중한 반면 JAM-GC는 ‘기동(maneuver)’개념이 추가된 것이 특징임

-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점-선-면 전략의 궁극적인 지향점으로서의 ‘공역’ 개념이 포함되었다는 점임¹⁾
- 2017년 1월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을 천명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최소한 ‘정치적 수사’ 측면에서는 미중관계가 더욱 대립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중국의 남중국해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함
 - 국무부 장관인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은 장관 인준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비유하여 중국을 자극함
 - 아직도 트럼프 행정부의 남중국해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략과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성될지에 대해 전망하기 어렵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저강도 기싸움, 살바싸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4. 미중 간 규범 경쟁

- 타국 군함의 연안국 영해 내에서의 무해통항권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항행의 자유권의 범위와 기준과 관련된 해양법 규범의 모호성은 해상 교통로 이슈를 새로운 안보 이슈로 창발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함(구민교 2016)
 -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는 달리 현재 군함의 무해통항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1992년에 발효된 자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무해통항 시 사전허가를 요구하고 있음
 - 미국은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미 해군의 군사활동도 관습국제법 및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핵심이익’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맞서 중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사전허가 없이 외국 군함이 군사훈련이나 작전을 수행하지 말 것과 군사시설을 배치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해양력 증강과 같은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근거한 규범적 접근도 강화하고 있음
 - 동아시아 해양안보 이슈가 규범적 측면에서 극적으로 드러난 것은 2016년 7월에 내려진 국제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중재판결임
 - 2016년 7월 12일 중재재판소는 본안 판정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9단선 내에서의 역사적 권리가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이루어진 중국의 행위는 필리핀의

*2017년 1월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을 천명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최소한 ‘정치적 수사’ 측면에서는 미중관계가 더욱 대립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음*

중국**남중국해 분쟁****관련국 간의****양자 협상을 통해****해결해야 한다는****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법적 이익을 침해하였고, 인공섬 건설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함

- 필리핀의 제소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인정 결정에 이은 중재판결은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등이 필리핀 정부에게 법률적, 외교적인 자문을 아끼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 중론임
- 중국 정부는 중재재판 개시 때부터 지속적으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을 부정하며 중재재판에 불참함
 - 2015년 10월 관할권 판정은 물론 2016년 7월 본안 판정 직후에도 중국 정부는 판결이 “무효(null and void)이며 중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은 관련국 간의 양자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대의사와 상관없이 중재판결은 재판의 양 당사국 모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짐
 - 중재판결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화평굴기’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중재재판 판결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선불리 하지는 않을 것임
 - 하지만 중재판결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경제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위상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국제해양법 레짐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구민교 2016: 53-54)
- 이미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2016년 6월 30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필리핀은 급속히 친중 반미 정책을 취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은 전임 베니그노 아키노 3세 정부 시절 필리핀이 서방과 손잡고 중국과 날카롭게 대립했던 남중국해 문제를 중재재판소의 판정과는 반대 방향으로 되돌리고 있음
 - 2017년 5월 18~19일 중국 구이저우성 구이양에서 남중국해 행동선언(DOC) 등과 관련한 중-아세안 고위급(차관보급) 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중국과 필리핀은 별도의 ‘중-필 남중국해 회담’을 가짐
 - 향후 양자 협의 채널이 정식으로 구축되면서, 중국이 반대하는 중재재판소 판정에 의한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본고는 동아시아의 해양 군비경쟁, 특히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해양력 경쟁의 양상을 분석하고 해양법 레짐을 둘러싼 규범 경쟁의 파급효과를 분석함
 - 동아시아 해양안보 환경은 미중 간 해양력 경쟁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음
 - 냉전시대의 전략적 통제와 같은 구속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제 일방적으로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해양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미중 간의 해양패권 경쟁은 역내 해양질서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음
 -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양국 간의 해양력 경쟁은 팽팽한 힘의 균형을 가져와 당분간 안정적 해양질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아울러 양국 간 규범 경쟁은 그간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던 일부 국제해양규범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효과도 있음
 - 그러나 군비경쟁은 경쟁국들 간의 안보 딜레마를 부추겨 분쟁 가능성을 더욱 높임
 - 강대국의 아전인수격 규범 해석 및 적용도 유엔해양법협약의 규범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물론 중국의 구상이 지정학적 진공상태에서 쉽게 실현되지는 않을 것임
 - 특히 미국은 중국의 인공섬 매립을 포함한 배타적 해상교통로 확보전략에 반대하면서 전술적인 차원은 물론 국제법적 차원에서도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음
 - 해군력 경쟁에서는 중국이 보다 공세적이지만 규범 경쟁에서는 미국이 좀 더 공세적임
- 해군력 경쟁과 규범 경쟁이 동시에 수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해역의 안보 환경은 당분간 매우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을 전망이다
 - 중국은 자신의 힘을 직간접적으로 시위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변국들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것임
 -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급속히 현실화되고 있는 중국 위협에 대비해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 즉 해군력 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
 - 아울러 동아시아 해양안보 지형은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규범 영역에서의 치열한 논쟁과 줄다리기의 결과에 크게 좌우될 것임

**동아시아
해양안보 지형은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규범 영역에서의
치열한 논쟁과
줄다리기의 결과에
크게 좌우될 것임**

주석

* 본 기고는 참고문헌에 표시된 저자의 2016년 기출판 논문을 군사력과 국제법의 관점에서 수정·보완한 것임.

- 1) 공역이란 우주 공간이나 사이버 공간, 공해, 심해저와 같이 특정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세계 어느 국가든지 다른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활용이 가능한 국제적·초국가적·범국가적 영역으로 이미 해양법협약을 포함한 유엔 차원에서 널리 활용되어 온 개념임.

참고문헌

- 구민교. 2016. “미중 간의 신 해양패권 경쟁: 해상교통로를 둘러싼 ‘점-선-면’ 경쟁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5권 3호. 37-65.
- 박남태·정재호·오순근·임경한. 2015.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 미중일러를 중심으로.” 『STRATEGY 21』 38호. 250-286.

❖ 저자 약력

■ 구민교

現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동아시아 정치경제, 해양안보, 국제행정을 전공하였으며,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정치학 박사 취득.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 부본부장, 하버드-옌칭 방문학자,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장, 한국정책학회 정책연구특별위원장 등을 역임.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Island Disputes and Maritime Regime Building in East Asia: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2009), “Japan and the Identity Politics of East Asian Maritime Disputes”(2017), “Belling the Chinese Dragon at Sea: Western Theories and Asian Realities”(2017), “미중 간의 신 해양패권 경쟁: 해상교통로를 둘러싼 ‘점-선-면’ 경쟁을 중심으로”(2016) 등 다수.

기획 및 감수: 기지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황지나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5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